

# 온라인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급증 대금지급 지연·부당반품 피해 심각

공정위, 유통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온라인쇼핑몰 '거래관행 개선' 69%  
지급지연·감액 등 불이익 경험 많아  
판촉비 전가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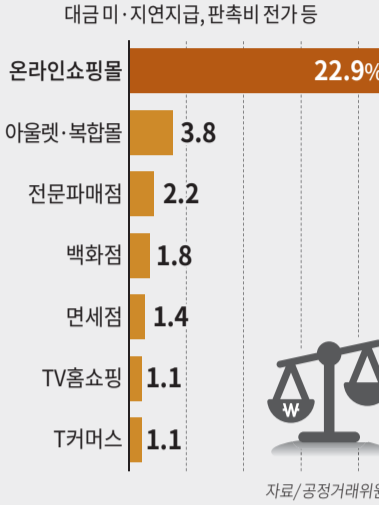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이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판촉비 전가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체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규모유통업체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85.5%로 전년(90.7%) 대비 5.2%포인트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업체별 거래관행 개선 응답은 편의점이 93.6%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91.0%, T-커머스(TV시청중 상품구매 양방향서비스) 91.0% 순으로 높았다.

## 유통업 불공정행위 경험률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은 지난해 80.6%에서 올해 69.3%로 떨어지며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불이익제공(8.4%), 대금지급(특약매입, 8.3%), 판촉비용(7.6%), 반품·수령지체(6.5%), 대금지급(직매입, 5.2%), 배타적거래(4.1%) 등 순으로 많았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대부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

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은 온라인쇼핑몰을 비롯, 아울렛·복합쇼핑몰(95.1% → 87.7%) 업체 거래관행 개선율이 크게 하락하고, 올해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전문판매점 업체 거래관행 개선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에서 대금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어,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반칙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사후 규율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KIAT, 양자컴퓨팅 플랫폼 구축 사업 시작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사업 착수 회의

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양자 컴퓨팅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실제 도입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달 29일 오후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양자컴퓨팅 플랫폼 제작 및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연세대 양자사업단이 보유한 양자컴퓨터 시설과 전문성을 활용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세대는 성균관대, 분자설계연구소와 공동으로 양자 관련 연구 시설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해 양자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의 수료를 발굴

해 양자 컴퓨팅을 통해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연세대 송도 캠퍼스에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 추진계획을 밝히고, 사업을 통해 바이오, 화학, 소재, 물류 분야 등 유망 활용분야 수요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178억원이 투입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 이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죽절초’ 선정

환경부, 불법 포획시 3000만원 벌금

환경부는 12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죽절초’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죽절초(竹節草)는 줄기에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에 풀(초본)을 뜻하는 한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풀이 아닌 흙아비꽃대과에 속하는 키 작은 나무로 분류된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은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돌아난다. 6~7월에는 황록색 꽃이 피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를 맺는다. 이 식물의 꽃말은 ‘사랑의 열매’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하고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까지 맺어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무분별한 불법 채취가 이루어져 자연 속에서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



1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죽절초. /뉴시스

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죽절초는 제주도 내에서도 출현 지역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되면 멸종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죽절초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태환 기자 kdh@

## “화학사고 예방부터 규제 합리화까지”

환경부, ‘제5회 화학안전주간’ 행사  
관련 정책 개선 방안 등 심층 논의  
VR 기기 활용 사고 시 대피 체험

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종로구 제이더블유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제5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하며,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비롯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또는 정책 개선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에는 지난 2월 6일부터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t)에서 선진국 수준인

1t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급성, 만성, 생태 등 유해 특성에 따라 나뉜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사 개막식이 열리는 2일에는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새롭게 출범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이 열린다. 아울러 ▲제4회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 이행 우수사례 공유대회 ▲중소기업 대상 화학안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사실확인(fact check) 등의 부대 행사도 선보인다.

둘째 날인 3일에는 ▲화학안전정책 포럼 종합토론회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전문가 토론회 ▲

화학안전정책포럼 이해당사자의 날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연합회(워크숍) 등이 마련됐다.

행사장 밖에서는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해 화학사고 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 엘지생활건강, 볼스윈, 이마트, 메디앙스 등의 기업에서는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을 전시하며, 화학안전을 주제로 하는 짧은(숏폼) 영상 공모전 당선작을 감상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화학안전주간은 민관이 함께 마련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방안을 통해 기업은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정책을, 시민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이로운 현명한 방법을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환 기자 kdh@kr

## 생활화학제품 안전 이행협의체 첫발

환경부, 안전사회 실현 목적

환경부는 오는 2일 서울 종로구 제이더블유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행협의체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자발적 협약(2년 주기)의 민간 협업을 확대·상설화하기 위해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이행협의체 참여기업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성분 공개, 제품 원료 단위 안전성 및 완제품 유해성 점검 등 자발적 조치를 시행한다. 시민사회는 협의체 과제 이행 전과정을 들여다보며 기업의 실행 의지를 돕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행협의체 운영 및 산업계의 이행을 뒷받침한다.

이번 발족식은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변화’라는 표어 아래 ▲이병화 환경부 차관의 환영사 ▲이행협의체

출범 소개 영상 ▲안전약속 선언문 낭독 및 서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 별도 공간에서는 ‘민관 협력이 걸어 온 길-국민과의 약속(스토리 월)’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100개)’이 전시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만으로는 시장의 빠른 변화에 완벽히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이행협의체가 화학제품시장을 선도할 것이라 기대하며, 협의체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태환 기자

## 농촌관광시설, 3.6만 곳 안전·위생 점검

농식품부, 내년 2월 14일까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4일까지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화기이용, 난방 등에 대비하여 농촌관광시설의 안전 및 운영체계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전점검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의 농촌관광시설 3만 6000여 개소로,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 위생, 운영 형태 등을 확인한다.

지자체에서는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 기관 및 부서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에서 소방·안전, 위생 등 관리 부실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른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후 3개월 이내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국민들이 농촌관광시설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위생·안전 교육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태환 기자